

동아시아의 성장, 위기, 통합: 21세기 발전모델의 탐색

1. 연구내용계획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일본, 동남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과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비교적 관점에서 밝혀내고 위기 및 변화의 압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별 국가의 인식과 정책 및 제도 개혁의 양상들을 분석함으로써 20세기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장·단점을 재평가하고, 세계화 및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의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탐색하는 데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런 위기와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동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과 갈수록 증대되는 지역협력 내지 지역통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평가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과 안정을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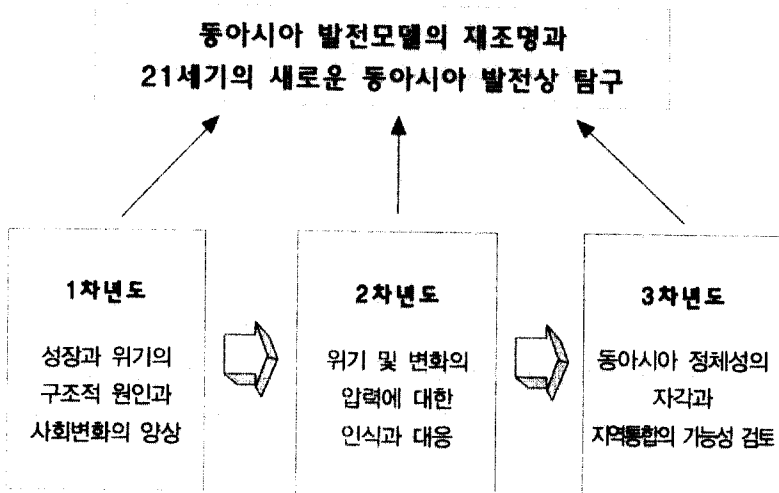
이런 광범위한 주제 영역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국제관계학, 역사학, 인류학, 철학, 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역전문가들 간의 학제적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연구목적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년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제1차년도에는 “동아시아의 성장과 위기”라는 공통주제 하에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이 20세기 후반에 이룩한 후발 근대화의 성과들, 즉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그리고 사회변동에 대해 평가하고, 그 과정의 모순들이 어떻게 1990년대의 위기와 혼란으로 표출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20세기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공과(功過)를 재평가할 것이다.

제2차년도에는 “동아시아의 대응과 선택”이라는 공통주제 하에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이 1990년대의 위기 또는 대내외적인 변화에의 압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정책적·제도적 대응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위기에의 대응 양상을 개별 국가별로 집중 탐색함과 동시에 국가들 간의 대응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21세기의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한다.

제3차년도에는 “동아시아의 정체성과 지역통합의 모색”이라는 공통주제 하에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이 탈냉전과 세계화, 그리고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갖게 된 동아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미래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점증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지역협력이 과연 지역통합의 방향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 나아가 그러한 지역통합이 동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발전모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이다.

〈그림 1〉 동아시아의 성장, 위기, 통합: 21세기 발전모델의 탐색



1. 연구 목적

(1) 주제 선정의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된 지역연구 분야에서 동아시아는 줄곧 학문적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이는 냉전 시기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에서 동아시아가 지녔던 전략적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동아시아에 대해 최근 국내외 학계가 또다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가 보여준 성장과 위기의 독특한 패턴이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의 주요 성과들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적 설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동아시아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지역 통합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실천적 모색이 필요한가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보도록 한다.

(가) 동아시아의 역동성: 성장, 위기, 통합의 가능성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성장의 속도나 변화의 정도에 있어서 역동적 성향을 강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패전의 패허 속에서 다시 일어난 일본은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70년대를 잘 극복하여 1980년대에는 세계 최대의 무역흑자국이 되었다. 일본에 뒤이어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등장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들어 동남아 국가들도 동북아 신흥공업국을 본 따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환위기 직전까지 만해도 동아시아 경제기적의 차세대 국가들로 급부상할 수 있었다. 1970년대 말 이래 추진되어 온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체제전환과정에서 소연방체

럼 분열되거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대혼란을 경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여 년이 넘게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1980년대로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말까지 일본, 동남아, 중국은 공통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지위를 향상해 온 셈이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경제적 번영에는 일본의 동남아와 중국에 대한 대폭적인 해외직접투자(FDI)와 정부개발원조(ODA)가 핵심적이었으며, 부상하는 중국경제를 배경으로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화인경제권도 한 몫을 했다. 일본과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는 선발 신흥공업국들로 대표되던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은 개혁·개방노선으로 선회한 중국과 동남아의 후발 신흥공업국들로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전역이 경제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은 비단 경제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이래 남부 유럽국가들로부터 시작해 남미 국가들로 확산되었던 '제3의 민주화' 물결을 전지구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화였다. 필리핀의 민주혁명에 이어 한국에서도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고조되어 권위주의 군부독재체제를 붕괴시켰고, 이러한 민주화 물결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산되었다. 비록 민주화(democratization)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자유화(liberalization) 개혁을 단행하였다. 민주화와 자유화 개혁을 통해 이 지역의 시민사회는 활성화되었고, 인권 상황도 크게 개선되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동아시아는 90년대에 들어 위기의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1980년대의 번영이 버블경기로 이어지면서 일본경제는 1990년대에 들어 장기불황에 빠지게 되었고, 1997년 태국의 외환위기를 시발로 외환·재정 위기가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세계화와 동아시아의 위기

1990년대의 탈냉전은 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 하는 듯했다. 동서 냉전에 의해 구획된 이념의 국경선이 북한과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은 거대한 자원과 노동력과 수요를 가진 황금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투기자본화된 국제금융자본은 황금알을 낳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낸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이 지역 국민국가들의 제도와 관행은 '영미식 세계표준'(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 지역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신중상주의적 발전국가는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로의 변환을 강요당했다.

1990년대 말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은 예기치 못한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외환위기는 단순한 유동성 위기로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발전국가' 모델의 위기로, 또한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부정으로 전개되었다. IMF의 국제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 나라에서는 IMF의 압력 하에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이 추진되었다. 비록 외환위기의 폭풍우로부터는 비켜서 있었지만, 일본 역시 1990년대 초 버블경기의 붕괴 이후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금융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했다. 그 결과 이들 나라에서 신자유주의 모델로의 부분적인 수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이 완전히 해체된 것은 아니었다. 나라에 따라 구조개혁의 양상과 경제실적 등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은 기본적으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여전히 '세계의 공장'으로서 성장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1930년대의 세계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로 평가되는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치열한 이론적 논쟁의 제기를 제공하는 바,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위기, 회복 등 세 역사적 국면에 대

하여 모두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첫째, 경제발전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기적'이라는 평가와 일시적 '거품'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대립한다. 둘째, 경제위기에 대해선 동아시아 경제의 내부적 결함을 강조하는 내인론과 외부적 제약을 강조하는 외인론이 대립하거나 '시장의 실패'를 강조하는 발전주의적 시각과 '국가의 실패'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시각이 대립한다. 셋째, 최근의 경제 회복에 대해서도 이를 자생적 저력의 증거로 보는 시각과 타율적 개혁의 효과로 보는 시각이 대립한다. 그러나 발전에서 위기를 거쳐 회복까지 지난 5년 동안 동아시아가 경험한 역동적 현실은 그와 같은 두 극단적 시각 사이에 균형잡힌 입장과 평가를 요구한다. 경제위기 자체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준 반면, 위기 이전의 급속한 발전과 위기 이후의 일정한 회복은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사실 서구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비교해볼 때 동아시아의 발전과정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현상은 1997년에 발생한 일련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 30년 이상의 지속적 발전과정에서 그러한 위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그 결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이론적 시각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위기, 회복은 각 단계마다 언제나 "예상을 초월하는 사태"로 인식된다. 즉 동아시아 지역이 보여준 변화의 역동성은 이에 대한 사전적 예측은 고사하고 사후적 설명조차 어려울 만큼 심각한 '인식의 지체'를 낳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경제위기 초기의 피상적 인식수준을 탈피하여 과거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 현실에 대한 보다 균형적인 인식, 미래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이제 경제위기가 시작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위기와 관련된 경험적 자료와 분석이 어느 정도 축적된 결과, 경제발전, 위기, 회복 가운데 어느 한 국면에 제한된 단편적 접근의 관행을 탈피하고 세 국면을 모두 포괄하는 거시적이고 동태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정체성과 지역협력의 필요성

다른 한편, 동아시아의 위기는 개별국가들이 내부적 발전과 관리에만 치중함으로써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새로운 발전전략을 찾아 내지 못한 데에 있다는 자각도 불러 일으켰다. 동아시아의 경제선진국인 일본의 통화와 금융산업이 영미식 표준에 비교하여 국제화되지 못한 점이나 정보통신기술의 경쟁력이 미국보다 크게 떨어지게 된 점은 모두 정보화·세계화 추세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도 WTO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국제보편의 규칙과 규범을 준수해야 할 책무를 갖게 되어 세계화의 압력은 경제는 물론 정치자유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조업에 승부를 걸었던 동남아 국가들은 세계자본의 위력 앞에 임금경쟁력이 보잘 것 없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20세기 개별국가들이 보호장벽을 치고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경제환경이 기술, 자본, 정보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경제환경을 맞이하면서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동아시아의 위기는 개별 국가들의 내부 개혁에만 치중해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동아시아라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내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서구자본이 주도하는 국제투기자본의 행태에 있다고 보는 견해는 동아시아가 방어적 연대를 취해야 한다는 구상을 갖게 만들었다. 아시아 통화기금(AMF)의 창설과 같은 정부간 통화협력 구상이 제기되었고, 엔의 국제화가 요청되었고,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에 대응할 수 있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를 창설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위기는 일본과 중국은 물론 한국에게도 아시아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바, '성장의 국면'이 아닌 '위기의 국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라 가속화된 세계화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면, 경제위기 이후 동남아와 동북아

에서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지역협력과 지역통합의 다양한 구상들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폐쇄적 민족주의와 권위주의를 추동한 1930년대 초반의 세계공황과는 대조적으로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개방적 지역주의와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의 충격에 대응하여 경제발전의 저력을 바탕으로 태동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질서는 상호갈등에 대한 현실주의적 '숙명'을 거부하고 상호의존을 위한 자유주의적 '기획'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연대는 경제적 필요성에서만이 아니라 구미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반감과 대안 모색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냉전 시기에 동북아 국가들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위협적이거나 착취적인 존재로 비춰졌다. 중국과 한국은 인도차이나 분쟁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침략자 또는 내정간섭자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으며, 일본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워 동남아 시장을 석권함으로써 태국과 인도네시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적 관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협력적 관계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1950~60년대 동남아에 불었던 (경제)민족주의 바람이 약화되고 동북아에서 지역적 불안 요인이 감소하면서, 두 지역이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의 교섭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증대하였다.

확대외상회담을 통해 동남아 안보를 위한 회의에 역외 국가들의 참여를 권장해 온 아세안은 1990년대에 들어 동북아 국가들을 포함시킨 지역협력의 제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에 동북아 국가들을 대화상대국으로 포함시켜, 동남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역기구의 출현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9년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으로 동남아 전역을 포괄하게 된 아세안은 최근 한국, 중국, 일본을 참여시킨 아세안 플러스 스리(ASEAN + 3)라는 다자간 협력기구를 출범시킴으로써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 협력의 잠재력을 키워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와 동남아간의 경제적 통합의 증진과 정치·군사·안보 분야를 포함한 지역 협력을 위한 대화 채널의 제도화는 동아시이라는 새로운 지역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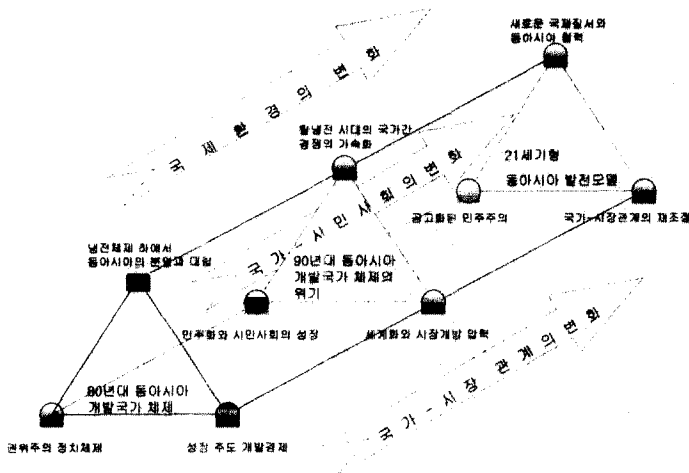
21세기의 새로운 발전 모델과 공동 번영의 모색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한 1980년대의 '성장'과 1990년대의 '위기'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양면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기본적으로 국민국가를 기본단위로 하고, 유교문화적 전통과 강력한 국가 리더십을 특징으로 하여 외형적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온 발전모델이었다. 후진성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강제적 자원 동원과 배분을 이용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의 수요 증가에 맞춰 공급을 확대해 가는 성장전략이었다. 그것은 또한 성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 기회의 확대를 통해 사회복지 문제를 값싸게 해결해 가는 공급 위주의 복지전략이기도 했다. 이러한 발전모델은 "따라잡기(catch-up) 근대화"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탈냉전과 세계화·정보화의 급진전은 20세기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기본 전제를 붕괴시키기에 이르렀다. 우방국들에게 세계 최대의 공산품 시장을 제공해온 미국은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관용적인 통상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간의 통상마찰은 곧바로 구조마찰로 발전하였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신중상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해체를 촉진하였다. 또한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인해 국제금융의 거래비용이 크게 줄어들자 금융의 세계화가 진행되었고, 이는 기업-은행간에 형성된 "코포리트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시스템의 변용을 촉진하였다. 나아가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따라잡기 근대화"의 달

성 내지 경제성장의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점차 “기술 프론티어 (frontier)”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 20세기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림 2〉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변천과 미래



20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모델은 한마디로 개발국가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 이전에 형성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동아시아 개발국가체제는 냉전체제라는 국제환경과 권위주의정권 하에서의 성장주도 개발경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탈냉전체제 하에서 서방진영의 반공연대가 약화되고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세계화되는 경제환경은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에 시장자유화와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경제발전의 결과로 성장한 중산층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의 형성은 민주화의 지속적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궁극적으로 공고화된 민주주의 체제와 국가-시장관계가 재조정된 발전전략을 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변화과정과 미래상은 〈그림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동아시아의 다양성 : 중국, 일본, 동남아의 상이한 발전 경로

이상과 같이 거시적 측면에서 역동적 변화의 과정을 공통적으로 보여준 동아시아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각기 다양한 조건 하에 성장과 위기의 상이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1990년대에 들어 일본이 탈산업화 단계에서 발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동남아 국가들은 산업화 단계에서 발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고도 성장을 계속 구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발전모델에 대한 반성과 대안 모색이 동아시아라는 공통성을 배후로 갖고 있지만 각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의 양상과 과제는 발전의 수준과 역사적 경로, 그리고 정치제도화의 수준과 체제안정의 정도에 따라 차별성도 비교적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중 국

중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기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중국공산당은 중앙의 권력체제로 정치적 안정을 꾀하면서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 부국강병을 실현해 왔다. 20세기 말에 남미나 아시아 국가들에서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권위주의정권들이 붕괴하면서 경제발전은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를 수반하게 됨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이러한 일반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경제발전 이후의 중국이 정치적 통제를 계속할 수 있을지, 중국식 체제전환의 정치체제는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는 중국연구의 최대 관심거리이다.

또한 최근 중국이 맞고 있는 새로운 도전으로서, 분권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권력 강화, 농촌과 도시의 격차, 실업자 증대, 사회계층 분화, 소수민족의 상대적 빈곤화 등은 근대화가 가져오는 초기 산업사회의 징후군들이다. 전통적인 도농갈등에 더해 국유기업의 개혁과 소유제 개혁에

입각한 사영기업의 도입 등은 계층분화와 빈부격차를 수반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 이에 반하여 국가통제는 이완되고 사회주의이념이 사회통합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중국사회는 정치 사회적 불안정을 노정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개혁개방은 자본주의 논리의 침투와 서구식 대중문화의 유입을 불러와 전통적 문화를 잠식하고 있다. 개혁개방과 세계화에 편입된 중국사회와 그렇지 못한 중국사회간에는 경제격차만이 아니라 문화격차도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과제들에 대한 해결능력은 곧 중국이 어떻게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사회의 안정과 최소한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도농간의 균형발전, 소수민족사회를 국가발전에 편입시키려는 서부개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노력 등 제반 경제정책과 아울러 애국민족주의를 활용하거나 보다 정치적 포용력을 갖추도록 정치체제를 개혁하려는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일 본

일본의 위기는 사회경제적으로는 고령화된 선진산업국의 위기이자, 정치적으로는 리더십의 위기이다. 인구의 1/5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차지함에 따라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복지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90년대 장기불황은 기존의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금융권의 부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인 가운데 막대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자 장기불황에 대한 구조적 원인론이 대두했다. 즉,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호송선단식' 보호라든가 계열식 기업간 관계 등 종래의 일본식 정치경제제도가 문제시되면서 일본의 패배감은 커졌다.

정치적으로는 1993년의 정계개편 이래 이른바 '55년 체제'가 붕괴되고 자민당의 일당우위체제가 연립정권체제로 전환되는 변화가 있었

다. 이익배분정치와 금권정치를 타파하고 정책지향적 정당체제와 공명 선거를 확립하기 위한 선거제도와 정치자금의 개혁도 이루어 내고, 행정 효율화와 정치적 리더십 강화를 위한 행정개혁도 진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치는 불안정 요인을 내포하면서 경제구조조정을 실천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대내적 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대외정책은 대미협력의 강화를 통한 정치적·군사적 역할의 확대로 전개되었다.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은 일본의 경제력에 맞는 군사력을 추구하는 '보통국가화'로 합리화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들어 진행된 일본사회의 보수우경화와 맞물려 주변국들의 경계를 사고 있다.

경제위기는 일본의 시민사회에 이중적으로 작동하였다. '작은 정부' 지향의 행정재정개혁과 지속되는 불황은 국가복지 재정의 현상유지, 기업복지의 쇠퇴를 가져오는 대신에 늘어난 실업자와 노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대를 시민사회로 하여금 충족시키도록 만들었다.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제공자로 대두하게 되는 시민사회를 정부에 의한 시민사회의 포섭으로 보는 비판적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시민사회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더 활기를 띠게 되면서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자치의 정신을 구현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의 국제화 노력은 소수민과 정주외국인을 수용하는 다원화된 개방사회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일본사회는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에 방어적 입장을 보임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개방사회로 전환하는 것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동남아 국가들의 위기는 고도성장 중의 충격적 위기로 특징지을 수 있겠다.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동남아는 동아시아 내 하나의 '소지역'으로서 종교적, 인종적 다양성이 크고 국가간 경제발전의 격차도 상당히 있다. 그러나 모두 1997년 외환·재정위기의 확산으로 혹독한 경

제위기를 겪고 있는 공통성을 보인다. 일부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나 성장의 정체 내지는 후퇴를 통해 다시 빈곤과 실업의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안전망이 산업화과정에서 최소한의 형태로도 제도화되어 있지 못했던 관계로 경제위기는 심대한 사회적 충격으로 확산되었다.

대개의 동남아 국가들이 1980~90년대에 구가하던 급속한 경제성장에서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총체적 경제위기에 직면한 데에는 압축성장에 내재한 모순이 공통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였던 외연적 성장이란 측면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처럼 소수의 화인이 경제력을 장악하는 자본 종속성도 공통된 모순으로 나타난다. 동남아의 관료기구는 일본이나 동북아 신흥공업국처럼 능력주의나 업적주의보다 군부나 자본가 계급들과의 유착을 통한 정실주의나 온고주의에 기초해 있다.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도 동남아 국가들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다.

1980~90년대의 성장단계의 동남아 정치경제는 사회의 계층계급구조, 국가의 자율성과 능력, 정치민주화의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특징을 드러낸다. 인도네시아처럼 보다 강력한 국가통제하의 발전전략을 추진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1986년 '피플혁명'으로 민주화를 실현한 필리핀은 과두제 세력 주도의 시민사회와 시장경제가 참여하는 분권적 발전전략을 도모했다. 태국의 경우는 권위주의적 관료지배체제를 통해 8~90년대의 산업화를 추진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정권은 자본의 제공, 교육신장, 사회혜택 제공 등의 신경제정책을 통해 급속한 발전을 추진하였다. 베트남은 '도이머이정책'으로 산업화의 대열에 시장사회주의 체제로 참여하고자 노력하였다.

경제위기는 인도네시아에서처럼 강력한 국가의 민주화를 가져오고 태국에서처럼 헌법에 기초한 민주화 개혁에 정통성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경제위기가 의미있는 정치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대신에 경제 및 사회관계의 변화를 촉진한 국가로는 말레이시아를 들 수 있다. 마하티르 수상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경제회생정

책을 선택하였다. 이는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제하는 대신에 화인자본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서 말레이인 우대 정책하에 규제적이었던 대 화인정책을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구의 초점

본 연구는 1980~1997년 사이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발전하면서 동아시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왔으며, 1997년의 외환위기가 동아시아 연대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1990년대의 위기와 문제의 공통성을 찾아보려는 노력과 아울러 이들 3개 국가 및 지역에서 발현되는 위기와 대응의 차별성을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후기산업화 단계에서 불황국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일본과 근대화의 성공으로 정치적 사회적 분열과 혼란에 직면한 중국, 그리고 산업화의 중도에서 성장체제가 붕괴한 동남아 국가들은 모두 내부적으로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게 된 셈이다. 이러한 위기의 차별성은 분석대상인 국가들의 발전단계와 민주화의 정도, 그리고 개방 및 세계화에 편입된 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위기 이후의 정치적 선택은 장래 이들 국가들이 새로운 발전모델을 정립하는 데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도 예측할 수 있다. 그 선택과 새로운 모델 정립의 성패 여부가 세계화·정보화로 상징되는 21세기 동아시아의 위상과 발전 방향을 결정해 줄 것이다.

(2) 기존 연구의 검토

(가) 기존 연구의 경향과 문제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광범위한 주제 영역에 걸친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별첨 세부 연구내용 부분에서 개별 소주제에 따라 다양한 이론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보완적 설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한마디로 개관하기란 용이하지 않다고 하겠다. 다만 동아시아 연구의 일반적 경향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적 방법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대화론적 시각

첫째, 기존의 동아시아 연구는 주로 근대화론적 시각(modernization perspective)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근대화론은 서구에서는 이미 70년대에 들어 종속이론을 위시해 여러 가지 비판이론들에 의해 폐기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남미국가와는 달리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함으로써 근대화 이론이 여전히 설득력을 지녔었다.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산업화에 따른 동아시아의 전통적 가치와 제도의 변화는 포괄적인 사회변동이론으로서의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듯하였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민주화가 다른 지역보다 성공적으로 전개됨으로써 경제성장과 아울러 민주화가 병행된다는 근대화론의 테제는 동아시아 발전의 설명틀로서 다시 매력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1980년대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을 위시한 동북아 발전국가들을 모델로 삼고 이들을 추격하는 산업화로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점이나 중국이 70년대 말 이래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의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점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 한국 등의 성공적 근대화 경험을 재현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근대화론의 가정은 서구 선진 사회의 성공 사례를 근거로 한 낙관적 전망으로서 다른 지역의 실패 사례를 설명하는 데는 부적절한 것이다. 또한 규범적 측면에서 근대화론은 제3세계 후발 공업국들의 국가목표를 선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은연중에 서구 사회의 발전 경험이라 마치 보편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서 다른 국가들도 이를 추종해야 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근대화론적 시각은 실제 동아시아가 경험하고 있는 발전과 변화의 경로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역동성과 다양성의 간과

둘째, 기존의 동아시아 연구는 대개 특정 시점의 단일 현상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는 경향을 지님으로써 소위 동아시아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경제발전이라는 외형적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인 연구 결과들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부상에 이어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의 고도성장 및 동남아 후발 신흥공업국들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일본, 중국, 동남아를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동아시아 경제권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능력주의적 관료제'에 의한 계획합리적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주목하는 '발전국가론'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분업체계에 주목하는 '기리기 성장 모형'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에만 주목함으로써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위기의 요인을 간파하지 못했다. 또한 성장의 정치를 주도한 정치체제와 이러한 체제를 지지한 정치·사회적 세력, 또는 내부적으로 분화해온 사회조직과 제반 사회집단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결여하고 있었다. 동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발발하자, 위기의 원인을 둘러싸고 내부적 요인 — 국가의 보호에 안주해온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등 — 을 강조하는 시각과 외부적 요인 —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적 행태 등 — 을 강조하는 시각간의 논쟁이 있었지

만, 여전히 경제환경과 정책으로 위기를 설명하려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발전과 위기의 역동적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는 매우 희소한 편이다.

아시아적 가치

셋째, 근대화론과 관련된 이론과 시각들이 지니는 근본적인 한계를 그것이 외래적 설명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내재적 접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적 시각에서 아시아의 발전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아시아적 가치’에 주목하는 유교자본주의론 등의 주장들이다. 즉 동아시아는 하나의 문화권으로서 공통된 가치들을 지니고 있는데,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 특수한 사회적 관계에 의한 상호의존, 사회의 안녕 유지와 국가발전에 대한 강력한 국가상 등을 흔히 “아시아적 가치”들로 들고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통상적으로 서구사회의 가치로 간주되는 집단에 대한 개인주의 우위, 연고주의보다는 보편주의 규칙과 규범의 우위, 시민사회의 대리인에 불과한 계약적 지위의 정부관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들은 동아시아가 20세기 후반에 들어 경제적 성공을 이룩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안녕보다는 가족의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시아의 근로정신을 낳았고, 후세대의 교육을 위한 부모세대의 적극적 교육투자는 아시아 근로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의 원천이 되었다.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이후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는 이름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연줄이나 계열 등 배타적인 특수한 네트워크에 대한 배려나 이익배분도 경제발전이란 목적달성을 위한 동원에는 순기능적이었다. 그리고 민간의 경제적 활력을 사회간접자본의 충원과 제한된 국내자원의 효과적 배분에 더하여 해외자본의 유치 및 선진기술의 이전 등의 제도적 지원으로 경제성장을 이끈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부였다. 이른바 동아시아의 기적은 다름

아닌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동원, 기업 성장의 최우선적 조직원칙, 정부의 시장개입적 경제발전 전략 등으로 실현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서구와는 다른 동아시아의 경험과 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나름대로 유의한 것이긴 했지만 주로 담론적 차원의 논의에 치중함으로써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사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적 가치는 경제 발전의 촉진 요인으로, 또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도 간주됨으로써 오히려 인과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근대화론이 경제결정론적 시각이라면 아시아적 가치는 문화결정론적 시각의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비록 아시아 문화와 가치체계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나열하고는 있으나 이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사회발전 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문화 혹은 가치라는 변수로 포장됨으로써 담론 수준의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적 가치는 이론적 차원에서의 지식 축적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보완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일방적 주장은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경시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편협한 사고와 가치관을 합리화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물이론적 개별국가 연구

넷째,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연구는 개별 국가 단위로 행해졌다는 점이다. 중국, 일본, 동남아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사회변동에 대해선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개별 국가 및 소지역 연구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을 뿐, 이들 세 지역을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단위로 묶어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개별국가 연구는 동아시아 연구로 곧잘 대표되는 위험한 일반화가 종종 행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동아시아 연구가

일국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주된 이유는 서로 각기 다른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고 같은 동아시아라고 해도 식민지 유산과 종교적 전통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별국가 단위로만 연구되어 온 데에는 국가 간 경제격차와 산업화의 수준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발전단계나 정치·경제체제의 상이성은 이들 세 지역 간의 비교연구를 어렵게 만들어 온 셈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기존의 거시적 차원의 비교연구들이 개별 국가 차원의 미시적 문제들을 간과하는 데서 발생하는 추상성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지역연구에서 비교연구를 가능한 한 배제하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연구 규모의 측면에서 학자 개인이나 소규모 연구로는 동아시아 전반에 걸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로 간주된다.

(나) 본 연구의 기본 시각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발전과 변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동아시아의 발전모델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즉 기존 연구 경향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적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려고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근대화론적 시각과는 달리 20세기 동아시아 사회의 발전을 탈근대화론적 시각에서 점검해 보고자 한다. 즉, 전통과 근대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여 '근대'에 의한 '전통'의 대치가 아니라 전통과 근대는 병존하면서 사회변화의 역동성의 두 축이 된다고 가정한다. 근대화론의 가정한 단선론적 발전론이나 진화론적 발전론을 지양하고 다양한 발전경로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한다. 이는 동아시아가 걸어온 발전의 경로가 전통과 근대, 발전과 위기, 그리고 변화와 지속의 병존과 상호작용이라는 다이내믹스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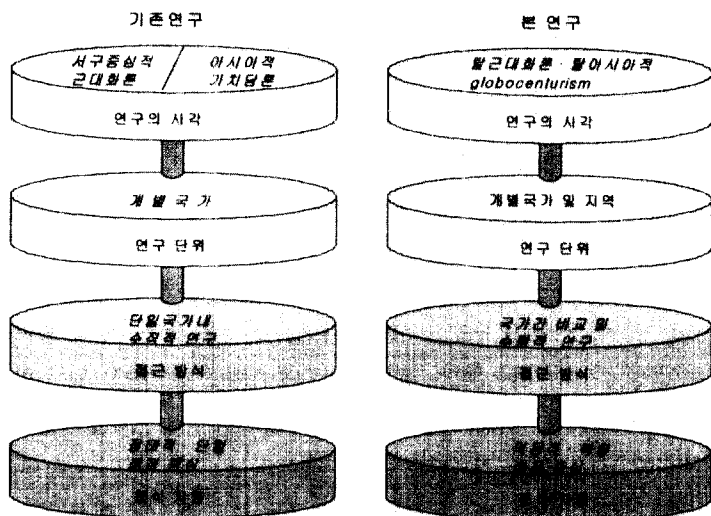
둘째, 본 연구는 외형적 경제성장과 공통적 개발모델에만 초점을 맞추어 오던 기존의 동아시아 발전 연구와는 달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시각을 접목한 다차원적인 동아시아 발전 연구를 지향한다. 즉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시민사회의 선택과 국가-시민사회의 역학관계를 통해, 또한 지역화·세계화 추세 속에 동아시아를 연대하고 세계화의 물결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문화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인과관계에 관한 '先개발後민주화'의 설명방식을 재검토한다. 동아시아의 권위주의 정권들이 주도한 개발전략의 성공이 가져온 중산층의 형성과 시민사회의 확장이 이 지역의 민주화를 가져왔다는 통상적 설명을 개별 국가의 특수성에 맞추어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테제는 특히 중국의 정치발전에 하나의 중요한 가설을 제공하고 있는 바, 중국 근대화의 산물인 중산층이 민주화와 체제안정의 압력 속에 어떠한 정치체제를 선택할 지는 동아시아 민주화 가설의 정립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가주도의 동아시아는 이제 국가와 시민사회가 경쟁하는 민주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선택은 21세기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정립에 핵심적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단일 현상에 대한 분석에 치중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현상의 이중적 측면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견지하고 보다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설명을 시도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이론이나 설명보다는 다양한 시각과 논의들을 종합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치중하고자 한다(이는 '지역 단위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본 공동연구는 개별 국가 연구나 소지역 단위의 비교연구를 결코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 단위의 거시적 연구는 개별 국가 및 소지역 단위에서의 미시적 분석의 결과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특정 이론이나 시각보다는 다양한 이론과 시

각의 종합을, 하나의 현상에 대한 분석보다는 상반되고 이중적 측면을 반영하는 구조와 원인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를, 그리고 단일한 접근보다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기존 연구결과를 재검토하고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동아시아의 여러 문제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그림 3〉 본 연구의 독창성



(3) 본 연구의 인식론적·방법론적 차별성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시된 새로운 대안적 접근의 주요 내용들은 향후 수행되는 연구 작업의 중요한 원칙들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론적 인식과 기본 전제 위에서 구체적인 연구 활동을 구상하고 있다.

(가) 동아시아의 개념과 인식: 비판적 검토

지역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지역’이라는 데는 학자간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지역을 구분하는 요건인지, 특정 지역의 범주는 어떻게 설정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하느냐는 작게는 연구 성과에, 크게는 해당 분야의 연구경향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식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의 범주는 어떻게 설정되며, 또 동아시아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서구중심주의

첫째, 동아시아는 구미인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극동’(Far East)이나 ‘동아시아’로 불렸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는 지배공간을 나누고 획정하는 지정학적 담론이며 권력이 각인된 지명이다. 당연히 동아시아를 읽는 담론도 ‘발전된 서구’에 대항한 ‘정체된 동양’의 이미지로 굳어졌다. 그러나 전후 사회과학계를 지배하게 된 발전론적 전통은 근대화론의 대상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보았다. 동아시아는 그런 점에서 유럽과 미국의 발전 경험을 투사한 반사적 대립물로 표상된다. 물론 최근 30년간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로 인해 새로운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연구경향은 서구중심주의적 이론들이다. 가장 최근의 실례로 우리는 노스(Douglass North)의 재산권 이론을 적용한 아시아 정체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 지역의 역사적 경험을 기준으로 다른 지역을 비교하는 연구들은 자칫하면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로 빠지기 쉽다. 그런 점에서 유럽중심주의에서 벗어난 ‘글로벌 중심주의’(globocentrism)에 입각한 새로운 이론적 담론들이 나와야 하고 이에 따른 동아시아 경험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가 구미형 표준경쟁에 비종있는 참여자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중심주의

둘째, 동아시아를 단지 동북아 국가들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거나, 중국과 일본간의 패권적 경쟁의 장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동아시아라는 인식의 지도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동아시아는 사실상 동북아시아(Northeast Asia)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는 동아시아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별도의 문화적·지역적 단위로 취급되었다. 최근에 들어 동남아가 경제 발전과 위기를 경험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자, 동아시아라는 개념 속에 숨겨진 동북아의 패권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를 경계하는 입장이 일부에서 움트기는 했으나, 동북아와 동아시아를 동일시하는 시각은 여전히 이 지역 연구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유교사회적 시각

셋째, 동아시아를 중국 중심의 문화질서 내지 유교문명권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문명 분류는 서구의 역사를 표준으로 삼아 비서구 사회나 제3세계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무시하거나 단순화하는 발전론적 사고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동아시아의 유교는 그 발상지인 중국에서부터 문화적 혼성화나 토착화가 심한 일본이나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지만, 이와 같은 시각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이 무시되거나 간과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시각에 대해선, 유교의 영향이 만들어 낸 동북아의 동질성이나 동남아와의 차별성이 과연 동아시아 전체가 가지는 지리적 근접성, 역사적 관계, 세계체제적 연계, 또는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문화정체성을 넘어설 정도로 강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동아시아는 개별 지역들의 그 다양한 특성들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가치들을 지니고 있다.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 특수한 사회적 관계에 의한 상호의존, 사회의 안녕 유지와 국가발전에 대한 강력

한 국가상 등이 아마도 “아시아적 가치”들을 대표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가치들은 통상적으로 서구사회의 가치로 간주되는 집단에 대한 개인주의 우위, 연고주의보다는 보편주의 규칙과 규범의 우위, 시민사회의 대리인에 불과한 계약적 지위의 정부관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들이다.

현실주의적 시각

넷째, 동아시아를 중국 중심의 전통적 지역질서가 근대로 접어들면서 일본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 도전과 위협을 받는 지역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국제정치나 외교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주의적 시각 역시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대다수 국가들을 동아시아 담론 형성 과정으로부터 소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정체성에 바탕을 둔 통합이나 공동체로서 동아시아의 가능성을 시초부터 부인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동아시아는 중국의 오랜 패권, 서구 열강들의 침략, 일본의 부상과 군사대국화,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의 재부상 등 지역 강대국들 간의 경쟁과 군사적 대립·갈등으로 점철된 불안정한 지역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

이처럼 중국이나 일본을 동아시아의 중심에 놓거나 동북아를 동아시아와 동일시하는 시각들은 모두 동아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중국 중심으로 보는 중화주의와 동북아의 국제관계와 지역질서를 힘의 관계로 설명하는 현실주의를 그 근저에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원래 동북아 이상의 지역이었으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동북아를 탈피하는 경향은 더욱 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역사는 이 지역에 속한 많은 국가들의 역사적 접촉과 교류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동아시아의 문화 역시 유교적 특성이 약화되거나 결여된 혼성화와 다문화주의로 변화되어 왔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대국과 서구 열강들이 장악

해 왔던 동아시아 국제질서도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괄하는 다자주의적 관계와 레짐들의 형성과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역 개념은 개별 국가와 세계체제와 같은 전지구적 국제사회 사이에 설정된 분석단위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전개된 세계사적 변화를 분석하면서, 동남아를 포괄한 동아시아와 중국·일본을 축으로 한 동북아 어디에 분석의 수준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의 지역 개념의 경험적 토대와 이론적 유용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기존의 동북아 또는 동북아 중심의 동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은 양자주의를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지역통합 운동이나 기구를 만들어 내지 못한 동북아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자랑하지 못하며, 협력이나 통합이 아닌 경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동북아 국제관계는 공동체로서의 지역 개념과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또한 현실주의적 동아시아관은 강대국 중심 내지는 이념적 대립을 갈등의 축으로 보는 냉전적 사고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의 후반은 경제성장과 민주화, 세계화와 정보화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획기적 변화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21세기는 공허하고 협소한 냉전적 사고와 구시대적 발상을 극복할 새로운 동아시아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동남아를 포용하는 동아시아 개념이 바로 하나의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20세기 마지막 10여 년 동안 동남아 및 동북아에서 나타난 다양한 교류와 협력, 그리고 연대와 통합의 노력들에서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나) 대안적 접근의 전략

동아시아 '지역' 단위의 연구

이상과 같이 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초 위에 본 연구는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본 연구

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 하에 중국, 일본 및 동남아 지역을 하나의 지역적 단위로 묶어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지역간 공동연구이다. 지금까지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은 사회경제적 발전의 격차와 정치·경제체제의 상이 등을 이유로 제각기 별도로 연구되어 왔으며, 하나의 전체로서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세 지역을 하나의 지역적 단위로 묶어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우리의 인문학적·사회과학적 전통과 담론에 비추어 볼 때 가치 획기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동아시아라는 단위에서 개별국가의 발전경로가 보여주는 특징을 분석하는 동시에 개별국가 수준의 연구결과들에서 동아시아의 공통적 특징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결국 개별국가 및 소지역 연구와 동아시아 지역 단위의 연구가 상호 결합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개별국가와 동아시아라는 지역단위 연구의 병행을 통해 본 연구는 개별국가가 동아시아를 쉽게 대표해 오던 종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공동연구 및 학제적 연구

본 연구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국제관계학, 역사학, 인류학, 철학, 문학 등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다양한 시각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대해 연구하는 학제적 협동연구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경제위기라는 현상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본 연구는 이를 보다 포괄적인 학제적 접근을 통해 이해하려고 한다.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경제위기는 이들 지역에 국가-시장 내지 국가-사회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관계의 전망과 새로운 사회·문화적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학문적 접근만으로는 복합적 현상의 총체적 이해를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제적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학제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첫째, 흔히 학제적 연구의 폐단은 실질적 의미보다는 형식적인 것으로 다학문적 연구인력의 개별 결과들을 단순 취합하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주제와 팀 구성에 있어서 가능한 한 학제적 성격을 띠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별 연구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팀별, 지역별, 전체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학문 분과 출신의 구성원간에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특정 분과학문의 이론 및 방법론적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고자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로 진행될 것이지만, 개별 연구의 성과들은 비교연구분과에 의해 이론적 종합화의 과정을 밟을 것이다. 이는 추상에서 구체로, 그리고 다시 구체에서 추상으로 상승해 가는 사회과학 이론화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경험적·실증적 연구가 갖기 쉬운 거시이론적 시각의 결여와 거시이론적·담론분석적 연구가 갖기 쉬운 경험적 구체성의 결여라는 기존 연구들의 통상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다년간 연구

본 연구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 하에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단계적으로 점검해 가는 다년도 연구 프로젝트이다. 앞서 기술했듯이, 1차년도에는 동아시아의 발전과 위기에 대해, 2차년도에는 위기에의 대응과 변화에 대해, 3차년도에는 지역통합의 구상과 접근방법에 대해 연구할 것인 바, 이들 주제는 논리적·경험적으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주제를 3년간에 걸친 다단계 연구디자인으로 체계화하였다.

또한 1, 2차년도가 개별 국가 및 소지역 단위의 연구라면 제3차년도에는 이것의 평가와 함께 동아시아 전체 단위에서의 거시적 종합을 시도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특히 이런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즉 개별 국가 및 지역 차

원의 연구를 병행하고 3년에 걸친 다년간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는 기존의 지역연구와 비교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흔히 지역연구의 결과물들은 사회과학 일반의 이론 구축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비교연구의 주요 성과들은 개별 지역의 구체적 현실을 제대로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자가 개별 국가 연구가 지닌 단점이라면 후자는 거시적 비교 연구가 초래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개별 국가 및 소지역에 대한 심층적 분석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이며, 따라서 이런 소기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가) 지역연구와 현지조사

본 공동연구는 지역연구와 비교방법에 주로 의존한다.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단일국가’ 연구와 단일지역 내 국가간 교차연구로 이루어질 ‘지역’ 단위 연구는 본 공동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취할 공통적 연구 방법이다. 한편 다수 지역간, 다수 국가간 교차분석을 통하여 일반화, 추상화, 이론화를 추구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비교방법은 1, 2차년도에는 3개 지역연구분과와 독립적으로 짜여진 비교연구팀이, 제3차년도에는 비교연구팀 외에도 다수 개별연구자들이 사용할 연구방법이다. 여기서는 본 공동연구가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연구를 기술하되, 중국, 일본, 동남아 연구자들이 각각의 현지 실정과 현지조사 환경이란 제약 속에서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연구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법과 전략에 그 초점을 맞춘다.

지역연구는 비교방법론자와 문화인류학자 간에 상이하게 정의된다.

비교방법론자들은 지역연구를 동일 지역에 속한 복수의 국가를 비교하여 이들이 공유한 유사 속성과 요소를 상수화함으로써 자연적 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연구란 결국 사례를 선정하는 비교방법의 한 전략으로 규정된다. 반면 문화인류학자들은 지역연구를 특정 국가나 지역을 구체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방법을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내부자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중시하며, 이러한 이해는 현지조사와 참여관찰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공동연구는 통상적인 지역연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인류학적 정의를 받아들여, 현지조사와 참여관찰의 의미를 다소 완화하고자 한다. 인류학자들은 현지조사를 장기간, 즉 최소한 모든 계절의 한 순환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 현지에 머물며 현지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현지조사로 보며, 참여관찰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고 체계적인 일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현지조사와 참여관찰은 인류학자들에게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연구 주제나 분야가 다른 연구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언어학이나 경제학의 연구 주제 중에는 현지에 갈 필요조차 없는 것도 있으며, 사회학의 연구 주제 중에는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만으로 탐구가 가능한 것도 있다. 현지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전문가, 정보제공자, 피면접자에 대한 인터뷰만으로 연구가 완수되기도 한다.

본 공동연구도 연구 주제의 성격 상 현지조사가 필수적이므로 모든 공동연구원들에게 현지조사를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장과 위기에 대한 전혀 새로운 문제제기와 분석, 현지 국가들이 고려 또는 채택하려고 하거나 막 채택한 대안과 정책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 세계화와 개방적 지역화를 지향하는 미래에 대한 전망과 같이 “현재적 의미”가 크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우리의 연구 주제는 현지조사 없이는 질적 수준이 높은 탐구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본 공동연구에 포함된 대다수 분과학문들과 공동연구원들이

설정한 대다수 개별 연구과제들은 그 성격상 문화인류학이 요구하는 엄격한 수준의 현지조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또한 문화인류학적 현지조사는 연구자들의 통제 수준을 벗어나는 정도의 연구기간과 연구비를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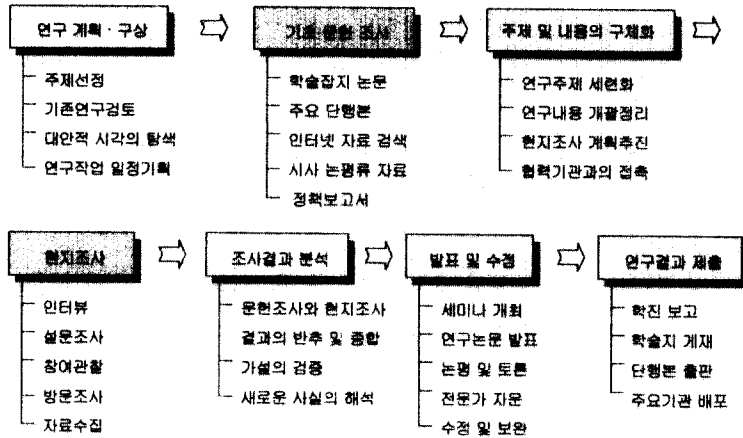
요컨대 이 공동연구가 상정하는 현지조사는 공동연구원들이 개별적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벌이는 모든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의미한다. 그 구체적 기간과 방법은 연구자가 속한 분과학문, 설정한 연구과제, 현지 국가의 정치 상황이나 연구 환경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해 질 것이다. 이하에서는 모든 연구자에게 공통된 자료수집, 기본적인 현지조사 활동, 그리고 분석과정을 간단히 개관하고, 지역/국가별로 구체적인 조사지역, 조사내용, 협력기관 등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둔다.

(나) 지역/국가별 자료수집

모든 연구는 먼저 기존 연구와 기초 통계 자료, 그리고 일차자료 등의 문헌연구로부터 출발한다. 시간과 연구경비에 있어서의 경제성을 위해 연구 지역별로 수집 가능한 기초문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각 지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구한다거나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동남아 연구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동남아와 관련된 자료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국내에서의 문헌자료 수집에 있어서의 한계로 각 지역을 직접 방문할 경우 우선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은 현지에서 가능한 문헌 자료의 수집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은 과거와는 달리 외부연구자가 현지에서 중국의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출간된 자료들은 중국에서 전개된 변화의 윤곽을 잡아내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연구를 문헌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를 지닌다.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중국의 자료

〈그림 4〉 연구방법 및 작업진행표



는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 개혁개방의 결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급속한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중국에서 정치, 경제 등의 분야는 변화의 속도와 폭이 대단히 빠르기에 문헌자료와 현실 변화간의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다른 동아시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를 국내에서 접할 수 있으나 주제별로 현지인의 관점에 대한 자료와 최신 자료들은 현지에서만 접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그러한 자료들에 대한 정리와 관리가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문헌자료만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측면에 대한 연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개별 국가들에서 발행되는 현지어 자료와 각종 문서들은 각 국의 현지방문을 통해 수집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동남아 개별 국가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도 복잡한 특수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개별 국가들에 관한 자료들은 연구 대상국가 현지에서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출간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는 역동적인 변화과정에 있고 지역적으로도 다양

하기 때문에 통일되고 종합적인 문헌자료 획득에 커다란 난관이 존재한다. 문헌자료를 통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연구를 위해서는 보완적 연구방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헌에 대한 의존을 넘어서서 현지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개별 연구자들의 실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다) 분과별 현지조사 계획

현지조사는 각 분과별, 팀별, 개별적으로 수행할 자료 수집 이외에 다양한 현지조사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그 대표적인 방법들로는 인터뷰 조사, 설문조사, 방문조사 등이 있다. 이러한 현지조사는 사전에 상당 수준의 연구진행을 통해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인터뷰 조사는 현지 전문가, 정부 고위관료, 행정실무자, 기업체 관련자, 사회단체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연구주제에 따라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설문지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방문연구에서는 각 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특정지역의 자치단체 및 행정기관, 기업,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한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각 연구자는 자신의 주제와 연구방법 이외에도 현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현지조사는 각 지역별로 지역 사정과 연구주제를 고려하여 팀별, 지역별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비용과 시간에 있어서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 ① 현지방문 이전에 국내 기초문헌 조사에 대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지역과 각 지역에 관한 주요단행본, 학술잡지 논문, 인터넷 자료, 시사 논평 자료, 정책보고서 등에 대한 검색을 말한다. 이에 기초하여 현지방문시의 조사활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한다.

- ② 이 현지조사 계획서에 따라 방문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의 현지 조사 활동에 도움이 될 협력 기관(대학, 연구소, 행정기관 등)과 사전에 접촉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 ③ 현지에 도착, 자료수집과 동시에 인터뷰, 설문조사, 참여관찰, 방문조사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 ④ 현지조사에 대한 각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지 전문가들과의 면담이나 워크숍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현지조사와 협력기관에 관한 계획은 다음과 같다.

〈중국〉

① 조사지역 및 협력기관

○ 대상 선정의 원칙

중국지역은 조사지역과 협력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고자 한다. 즉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서, 18명에 이르는 공동연구원들의 필요를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되, 현실적 여건으로 보아 주제별로 조사지역과 협력기관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중국이 방대하고 지역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이가 크고, 중국연구 내의 주제 역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조적인 성격을 갖는 두 개 이상의 조사지역과 협력기관을 선정하는 복수 조사연구의 원칙을 쓰려고 한다. 둘째, 중국연구분과 내에서 지역과 기관을 선정하되 실제 연구는 해당 지역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는 자율성의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 셋째, 조사지역과 협력기관이 결정되었더라도 다른 기관과 지역으로 최대한 교차 조사를 할 수 있는 교차 조사연구의 원칙을 통해 다양한 현지조사를 실행할 것이다.

○대상 지역 및 협력기관

이상의 고려를 통해 중국연구분과는 조사대상 지역으로 北京과 중국 내 차이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두 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한 지역은 발전된 동부 연해지역에 속한 곳이고 다른 지역은 덜 발달된 내륙지역에 속한 곳이다. 이처럼 대조적인 두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낙후된 지역과 발전된 지역은 그 자체로 개혁기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위기와 발전을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둘째, 두 대조 사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중국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다양성을 알 수 있다. 셋째, 대조적인 사례가 중국 전체와 맺어 가는 관계방식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국가체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이러한 고려에 근거하여 중국연구분과는 연차별 연구방향의 변화에 따라 대상 지역과 협력기관에 다소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향후 3년간 다음과 같은 세 지역과 여섯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대략 아래와 같다.

- 北京大學 國情研究中心과 中國社會科學院 : 북경대 내의 국정연구중심은 중국을 연구하는 자체 연구기관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는 기관이며 중국사회과학원은 중앙정부 소속의 종합적 사회과학연구기관이다. 이 두 협력기관은 北京에 소재하며 중국 전 지역의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므로 이론화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가장 적절한 기관이라고 본다. 또한 北京, 天津 등 발달된 대도시 지역의 조사연구에 많은 협조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영역이 전국적 범위에 미치기 때문에 낙후지역 조사연구에도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復旦大學 國際關係與公共事務學院과 上海社會科學院 :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은 상해의 중심대학인 복단대내에서 협조가 가장 가능한 단과대학이다. 상해사회과학원은 上海市 소속의 종합적 사회과학연구기관으로 上海市를 포함한 연해 선진지역을 조사연구 하는데 많은 도

움을 줄 수 있다.

- 四川聯合大學 宗教研究所와 四川社會科學院: 종교연구소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관이며, 사천사회과학원은 내륙지역인 四川省 소속의 종합적 사회과학연구기관으로 내륙의 비교적 침체된 도시와 농촌지역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현지조사 계획

중국연구분과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전체와 개별 연구과제의 성격에 맞추어 사례 선택과 조사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현지조사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주제에 따른 다양한 사례선택으로 개별 연구과제의 성격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지역과 단위를 선택하고자 한다.

- 北京大學 國情研究中心과 中國社會科學院은 모든 주제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기초자료 수집과 전문가 면담과 관련된 주제에 적합한 곳이다. 예를 들어 “개방의 이론체제와 사회주의의 굴절”과 같은 주제에 효율적인 지역이며 협력기관일 것이다. 復旦大學 國際關係與公共事務學院과 上海社會科學院은 “단위체제의 변화와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위기”,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와 과제”, “사영기업가의 등장과 정치 변화”, “중국의 WTO 가입과 대외무역체제의 변화” 등의 주제와 관련해서 유용한 지역과 협력기관이다. 四川聯合大學 宗教研究所와 四川社會科學院四川社會科學院은 “농민이탈과 호적제도 변화”, “농촌 개혁과 농업 현대화”, “지역주의와 분리주의” 등의 주제와 더불어 종교, 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위해 선정되었다. 2, 3년차 연구 역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상의 분류 기준에 따라 조사 지역과 기관을 결정할 것이다.

- 단위 선택은 개별 연구주제의 성격에 맞추어 조사대상 단위들을 선정한 것으로 학계인사(전문가), 정부기관(관료), 기업(가), 대중(도시지역, 농촌지역), 사회단체, 기타 등으로 나누어 접근할 것이다.

○연구 성격에 따른 조사방법 선택

조사방법의 선택 역시 개별 연구주제의 성격에 따라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개 이상의 방법을 교차시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주요한 조사방법의 예를 들면 양적 조사로 경제발전, 인구이동, 계층 분화 등을 들 수 있고, 질적 조사로 권력관계, 문화 혹은 가치관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면접조사, 참여관찰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전문가 조사로 중국 내 논쟁 및 논의 동향 검토와 이데올로기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학자교류를 통한 분석의 객관성 검토 작업

〈표 1〉 중국 주제별 현지조사 계획안

지 역	협 력 기 관	주 제	비 고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北京大學 國際研究中心	· 기초 자료 조사 · 전문가 면담 · 지방 현지조사 안내	현지조사 공통지역
上海	上海社會科學院 復旦大學 國際關係與 公共事務學院	· 단위체제의 변화와 사회주의 복지체제 · 국유기업 개혁과 실업 · WTO 가입과 대외무역체제 변화 · 사영기업가의 등장과 정치변화	연해팀
四川	四川社會科學院 四川聯合大學 宗教研究所	· 농민이탈과 호적제도 · 지역주의와 분리주의 · 농촌 개혁과 농업 현대화 · 종교와 문화에 대한 연구	내륙팀

중국연구분과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측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연구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인 학술 교류의 바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우선, 중국 현지조사 시 적절한 형식으로 중국 측 학자들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둘째, 토론회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학자를 초빙하여 적절한 형식의 간담회나 강연회, 발표회 등을 개최한다. 셋째, 중국 측의 교류 대상 학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 범위를 앞에 언급한 교류대상 기관에만 국한 시키기보다는 중국학자들의 소속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해당 주제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연구분과의 이름으로 요청하여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2) 일본

① 현지조사 내용

일본지역 연구에 포함된 각 분야별 개별 연구들은 다양한 연구주제 만큼이나 다채로운 연구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공통점이 있다면 연구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에 포함되는 사례가 하나 혹은 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의 선거제도, 자민당, 기업의 거버넌스, 특정 시민단체 등이 분석 단위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역연구에서 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채택될 것이다. 일본연구 내의 분야별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팀은 연구의 대상의 최고의 추상성을 요하는 만큼 1차 자료와 문헌분석, 그리고 인터뷰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55년체제 하에서의 역대 수상들의 리더십 비교, 55년체제 하에서의 일본 사회당의 정책과 정치 활동, 구조적 요인들이 외교정책에 미친 영향 평가, 일본 관료의 장·단점 등의 주제가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자민당의 정당연립의 지속을 설명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의식변화 연구와 이익유도정치와 지지 기반 안정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는 설문조사 혹은 선거 데이터 등의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경제팀은 경제체제를 구성하는 분야별 활동과 정치와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의 설정이 필요하다. 즉 금융기관과 부실채권의 문제, 재정위기의 성격, 기업 거버넌스의 유형 분석, 정부 조직에 대한 재계의 압력 행사, 일본의 대한국 투자정책 등의 과정은 정부와 재계의 기구들을 둘러싼 상호작용과 정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 만큼, 여기서는 문헌분석 이외에도 객관적 데이터 활용, 그리고 전문 관료와의 인터뷰를 필요로 하게 된다. 1930년대와 1990년대의 불황을 비교하고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문서들의 검색 작업이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문화팀은 그 연구방법 뿐 아니라 연구 대상자체가 지역연구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 하겠다. 그리고 1차년도 연구 주제가 소자, 고령화 사회의 진행 속에서 사회 안전망의 약화에 대한 자치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지역 시민단체에 대한 방문조사는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영리 시민단체의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의 실태 조사와 시민단체 지도부와 자원자의 활동과 이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를 위해서, 그리고 생애학습의 장으로서의 공민관(公民館)의 사례조사와 정보통신 기술이 지역사회의 마치츠쿠리(町づくり)운동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보화가 시민사회의 활동 변화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모두 행정자치 지역과 그 지역의 시민단체에 대한 방문을 통한 기초자료 수집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대일본에서의 시민사회 등장과 성장에 대해서는 일본 도서관들에 소장된 고문서들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필요로 한다.

② 현지조사계획

위에 소개한 각각의 연구조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2003년 2월 예정으로 일본 지역 연구자들 공동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 방문 전 개별 연구자들의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와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을 통해 각 논문의 초고를 작성하여 방문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 각 팀별로 특성에 맞는 연구소나 단체를 선정하여 사전 접촉을 통해 세미나 토론 인원과 자료 수집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인한다. 사회문화 분야의 연구자들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시민단체들과의 사전 접촉을 통해 인터뷰조사와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를 의뢰한다.
- 일본 지역 중간 Workshop : 방문 기관 소속 연구원과 그 외의 현지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논문의 발전 방향과 필요한 연구 활동 및 자료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③ 조사지역 및 협력기관

각 팀별로 다음의 연구소들을 방문하여 간담회와 함께 자료수집 및 필요한 경우 인터뷰조사를 실시한다.

○ 정치팀은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JIIA, The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국립정책대학원 대학 (GRIPS,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 일본방위연구소

○ 정치경제팀은

-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 아시아 경제연구소(일본무역진흥회) (IDE-JETRO,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cs)

- 교토 대학 법학과 (마부치, 무라마쯔, 오오타케 등 정치경제분야 유수의 학자들)

○사회문화팀은

-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교토)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 도쿄대학교 사회정보센터

이상의 연구소들이 선정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같다. 첫째, 위의 연구소들은 각 분야별로 일본을 대표하는 연구 기관이다. 둘째,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의 경우, 공동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와 학술교류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셋째, 국립정책대학원대학, 도쿄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교토대학 법학과 등과는 본 연구과제 참가자들과 오랜 기간의 인적, 학술적 교류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현지조사 활동에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경우 외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그리고 총무성 등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기초자료 조사 혹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다. 역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자들은 방문연구소 소재 대학교의 도서관 이외에 여타의 도서관과 연구소를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수행한다. 또한 위의 협력기관 이외에 미리 선정한 지방자치 단체와 시민단체를 방문하여 인터뷰조사와 설문조사를 실행할 수 있다.

〈표 2〉 일본 현지조사 팀별 협력기관 일람표

팀	협 력 기 관	비 고
정 치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국립정책대학원 대학 일본방위연구소	
정치경제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아시아경제연구소(일본무역진흥회) 교토대학 법학과	
사회문화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도쿄대학 사회정보센터	

3) 동남아

① 현지조사의 내용

이미 본 연구의 개별과제 연구자들은 모두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의 대학교 및 연구소, 행정기관들과 연계하여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특히 이들 연구자들은 한국동남아학회의 소속 회원들로서 태국 쉐라롱껀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에 본부를 두고 있는 AUN(ASEAN University Network)과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싱가포르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와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각 연구자들이 연구대상으로 하는 국가 및 지역의 연구소, 대학 및 지역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 경력과 경험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현지조사는 연구자 개인의 개별적인 조사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그 이유는 각 연구자들 개인이 맡고 있는 연구주제의 내용과 성격이 서로 다르고, 현지에서 연계해야 될 대학교나 연구소, 각종 전문가들의 유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이 공통된 부분이 있을 경우 대상 국가별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동시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시킬 수도 있다. 특히 각 팀의 개별 연구자들이 맡고 있는 연구국가가 동일할 경우 연구자들 사이의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국가별로 동시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② 지역선정과 협력기관

본 연구의 대상국가별 협력단체나 대학교, 행정기관 등은 다음과 같다.

태국의 경우 수도 방콕에 위치한 쉐라롱껀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 탐마삿대학교(Thammasat University), 북부 치앙마이 의 소재 치앙마이대학교(Chiang Mai University) 등과 각 대학교 부설 아시아연구소(Institute of Asian Studies), 민주주의연구센터 (Democracy Studies Center) 등을 본 연구를 위한 협력기관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위 대학과 연구소들은 이미 개별 연구자들이 과거 연구경험 을 통하여 유기적인 연계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태국의 내 무부, 외무부, 통상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Commission of Thailand) 등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현지 담당자들과 인터뷰도 수행할 예정이다.

필리핀의 경우 마닐라 소재의 필리핀대학교(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와 드라살르대학교(De La Salle University), 제3세계연 구센터(The Third World Studies Center), 민중민주주의연구소(IPD: Institute for Popular Democracy) 등이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협 력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들 기관 역시 필리핀 연구를 담당할 개별 연구자들과 직·간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 수행에 있어 많 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밖에도 필리핀 내무부와 외무부, 경제부, 선거관리위원회(COMELEC: Commission on Elections) 등 정부기관 과 각종 비정부조직들을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각종 집합자료와 문헌자료들을 수집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도 자카르타 소재의 인도네시아대학교 (Universitas Indonesia)와 족자카르타 소재의 가자마다대학교 (Universitas Gadjah Mada) 등이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기관 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민간연구소로서 수하르토 정권기부터 가장 왕성 한 연구활동을 벌여온 전략 및 국제관계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우리 공동연구원 몇 사람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그 밖에도 현지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률구조재단(LBH: Yayasan Lembaga Bantuan Hukum Indonesia), 민족민주연구소(NDI: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등 비정부조직들을 자료조사를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내무부와 외무부, 경제부, 인도네시아선거관리위원회(KPU: Komisi Pemilihan Umum) 등 인도네시아의 각종 정부기관들을 방문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도 쿠알라 룸푸르에 소재한 말레이대학교(Universitas Malay)를 중심으로 각 지방 소재의 대학교들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의 각 정부 부처 및 통합말레이민족기구(UMNO: United Malay Nationalist Organization), 말레이중국인협회(MCA: Malayan Chinese Association), 말레이인도인회의(MIC: Malayan Indian Congress), 국민정의당(Parti Keadilan Nasional)과 같은 정당들을 방문하여 담당자들과 면접을 실시하고, 말레이시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할 예정이다.

베트남의 경우 인문사회과학원(Trung tam Khoa hoc Xa hoi Nhan van Quoc gia: National Centre for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산하의 경제학연구소, 세계경제연구소, 사회학연구소, 역사학연구소 등과 베트남국가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하노이 및 호찌민시 소재) 등을 연구협력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연구자들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현지 전문가와 학자들을 인터뷰할 계획이며, 국립도서관(Thu vien Quoc gia: National Library) 및 각 정부 부처들을 방문하여 연구 자료들을 수집할 예정이다.

〈표 3〉 동남아 국가별 협력기관 계획안

국 가	협 력 기 관	비 고
태 국	쫀라롱껐, 탐마삿, 치앙마이 대학 아시아연구소, 민주주의연구소	
필리핀	필리핀, 드라살르 대학 민중민주주의 연구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학, 가자마다 대학 전략 및 국제관계연구소(CSIS) 법률구조재단, 민족민주연구소	
말레이시아	말레이대학 통합말레이민족기구(UMNO) 등 정당	
베트남	베트남국가대학 인문사회과학원	

(2) 연구내용

본 연구과제는 중국, 일본, 동남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과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비교적 관점에서 밝혀내고 위기 및 변화의 압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별 국가의 인식과 정책 및 제도개혁의 양상들을 분석함으로써 20세기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장·단점을 재평가하고, 세계화 및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의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런 위기와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동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과 갈수록 증대되는 지역협력 내지 통합의 제도화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런 광범위한 주제 영역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국제관계학, 역사학, 인류학, 철학, 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역전문자들 간에 학제적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연구목적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년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제1차 년도에는 “동아시아의 발전과 위기”라는 공통주제 하에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이 20세기 후반에 이룩한 후발 근대화의 성과들, 즉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그리고 사회변동에 대해 평가하고, 그 과정의 모순들이 어떻게 1990년대의 위기와 혼란으로 표출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20세기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공과(功過)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즉, 동아시아의 위기는 한 동남아 국가에서 다른 동남아 국가로, 동남아 국가에서 동북아 국가로, 결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던 모범적 동아시아 국가들로 “전염”되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전역에 위기가 파상적으로 확산되면서,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보편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남아는 경제위기의 진원지이며, 일본은 위기의 장기지속을 보여주는 반면, 중국의 경우엔 그것이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로서 동아시아 지역이 지니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배경 하에 이것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연구분과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성장의 다양한 요인들과 그 이면에 내재해 있는 문제점 내지 향후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즉 위기의 잠재적 요인을 밝히는 데 일차적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경제 성장에 따른 정치사회적 변화와 그것이 중국의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는 탈냉전 이후 일본사회에 닥친 위기의 성격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정치 분야에서의 55년체제의 붕괴, 경제 분야에서의 버블붕괴와 장기불황,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소자·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위기를 대상으로 한다. 동남아시아 분과는 1990년대 전반기의 경제발전과 후반기의 금융위기, 그리고 그 이후의 회복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초기의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현대화 과정인지, 아니면 거품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후반기의 위기는 시장의 실패인지 국가의 실

패인지, 혹은 내부적 요인 탓인지 외부적 제약 탓인지, 그리고 그 이후의 회복은 자생력 체력강화의 과정인지, 타율적 개혁의 적용과정인지라는 논쟁적 주제를 중심으로 동남아의 발전과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2차년도에는 “동아시아의 대응과 선택”이라는 공통주제 하에 일본, 중국, 동남아 국가들이 1990년대의 위기(혹은 잠재적 위기)와 대내외적인 변화에의 압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정책적·제도적 대응의 노력을 기울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또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중국 연구분과에서는 중국의 현실(소위 ‘國情’)을 정권 지도부 및 지식인들이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여 어떤 정책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개혁정책들의 내용과 서구문화에 대한 수용 방식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일본은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제정책의 재조정과 제도개혁의 양상, 그리고 고령화 사회와 같은 사회문화적 문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남아시아의 경우, 경제위기의 양상과 영향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영역에 있어서 각국의 위기 대응 방식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3차 년도에는 “동아시아의 정체성과 지역통합의 모색”이라는 공통주제 하에 일본, 중국, 동남아 국가들이 탈냉전과 세계화, 그리고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갖게 된 동아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미래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지역협력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지역통합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과 지역통합의 추세가 세

제화에 역행하는 배타적인 의미에서인지, 아니면 단순한 지역성을 넘어 세계적 협력을 추구하는 발전적 의미에서의 지역 협력과 통합의 성격을 지니는 것인지를 규명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연도별 주제의 성격과 개별 국가의 특성에 기초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연구분과는 다시 세부 주제 및 전공영역을 기준으로 3개의 연구팀으로 나누어 개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개별 연구의 성과들은 각 팀별로 토론을 거친 다음 각 지역별 세미나에 보고되고, 각 지역별 세미나에 보고된 연구 결과들은 비교연구분과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분석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소·중형 프로젝트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집합적 공동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학제간·지역간 비교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